

# 유가관리제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金 乾 洽

〈석유협회 홍보이사〉

**신한국의** 신경제를 이끌어갈 金泳三 차기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환기에 대임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필요한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다.

金 차기대통령은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경제개혁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고, 그의 새 정부는 각종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사실 개발초기단계의 소규모단계에서는 정부의 지도가 통했으나 이제 규모가 큰 경제를 정부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발전에 방해가 된다. 규칙이 정해진 사회에서는 전문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아서 한다. 정부는 각분야에서 자유경쟁의 시장원리가 작용하고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감시하면 된다. 이해가 대립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이 규제보다 조정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는 석유정책도 예외가 아닐듯 싶다. 특히 최근 석유산업 수익성 악화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이제 정유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 당국도 현재 정유업계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얼마전 당협회 주최로 열린 석유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어느 토론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물가정책을 최우선과제로 다룬 결과 에너지정책이 최하위개념으로 밀려나 결국 현재 석유산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배태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 나온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비록 톤과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석유정책의 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규제위주의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석유수요관리를 고려한 가격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정책당국자는 빠른 시일내에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따라 국내유가가 변동되도록 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우회적으로 외견상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식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소비의 감소와 쌀의 과잉생산은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고 우리의 영농기술이 향상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에너지의 과소비를 절약정신의 해이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등은 모두 피상적인 관찰인 것이다. 이 모두 잘못된 가격정책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격규제에 대한 일반의 잘못된 인식중 첫째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거나 동결하면 그 가격은 안올라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우회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품질의 저하(대중음식, 개인서비스), 고가의 유사 신제품 개발(라면, 담배), 비규제품목의 끼워 팔기(예식장, 장의사), 불법 압거래(택시합승, 은행의 꺾기)등의 우회적 방법으

로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요금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80~90년 기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공요금 상승률이 연평균 7.5%로 같은 속도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격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부분과 같이 경영상태가 제각각인 여러개의 민간기업을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경우, 가격조정의 기준이 그 산업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제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이라도 도산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가격을 규제하는 정부부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격규제의 최종책임이 경제기획원에 전가되는 현상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세계은행은 한 보고서에서 31개 개발도상국의 가격규제수준을 계량화하여 이를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두 변수간에 뚜렷한 반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효율화를 위해 가격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더욱 살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규제의 획기적인 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일반국민의 가격규제와 그 폐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개방화시대이다. 규제위주의 유가구조를 언제까지나 현행처럼 유지하고 갈 수는 없다. 이제 유가는 억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억제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급조절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적 입장에서 경제원칙에 충실한 유가가 되어야 한다. 정유사의 손실 미지급금의 누적으로 정유사의 경영이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하여 가격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문제를 누적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좀더 당당하여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고통의 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통없는 성과는 없다. 따라서 정책운용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또한 국민도 부담을 전제로 하여 과실을 기대하는 국민적 합의가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저유가기조의 지속으로 정유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국내의 석유 과소비로 석유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 세계 최고의 소비증가율을 나타내는 동안 정유산업은 공급시설기반 확충등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과도한 투자재원소요로 시설고도화사업 추진등 질적 성장이 지연되었으며, 석유수입 증가에 따른 국제수지 부담이 무역역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소홀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이 극히 낮아져 향후 고유가 도래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도 수요관리형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지구적 환경규제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정유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이익규제로 재투자를 위한 재원은 커녕 오히려 적자마저 보이고 있어 不實化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선 정유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유사의 실발생비용 및 수익을 유가에 적정하게 반영시키고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등 원가요인을 국내유가에 그때 그때 반영하여 정유사의 경영외적 손실부담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 정유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물가관리형·정유사 이익규제형의 유가관리기조를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산업정책적인 유가관리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일은 물론 물가안정개념에만 얽매어서는 이룰수가 없다. 현재의 수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비록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한꺼번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여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물가안정목표에 얽매어 언제까지나 고식적으로만 대응하여 유가구조의 왜곡을 더 키워 갈 수는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구조 개선문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과 선택이 남았을 뿐이다. ●